

신현송 “통화정책 독립성 흔들림 없어”

〈한국은행 총재〉

2026 국정감사

한은 연속 금리인상 판단 근거 등 쟁점 부상
신 총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미흡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8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조치가 금융시장 충격과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근원물가를 미리 제어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ETF)의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점은 사과했다.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연속 금리 인상의 판단 근거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부담, 정부의 확장 재정과 통화긴축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 총재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 금리 인상으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상보다 먼저 움직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움직임에 쫓겨 뒤늦게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미리 대응하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올려 연 2.5%에서 3.0%로 높였다.

신 총재는 금리 방향을 미리 알리는 포워드 가이드런스도 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 봤다. 5~6월부터 인상 방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됐고, 실제 정책 변경에 앞서 안내함으로써 이후 더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중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부담이 내수와 지방경제에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추가 인상 필요성을 둘러싼 질의에는 유가 상승의 비용 전이와 향후 수요 압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물가 상승의 원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 유가·환율 등 비용 요인인데도 두 차례 금리를 올린 배경을 묻자,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가 아직 목표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은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신 총재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에 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보완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적하자 신 총재는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다”며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채우 정책을 거론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최태원, 사회가치 보상 강조

〈SK그룹 회장〉

“‘새로운 자본주의’ 앞당겨야”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최 회장, 행복나래 등 사회적 가치 성과 공유
기업 이타심에 의존한 가치 창출 한계 지적
“정교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 필수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기업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의 첫 ‘생태계 리더십 교류 프로그램(ELF)’에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보상받는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타심에 의존한 참여의 한계를 들었다. 그는 “이타심에만 의존해서는 팽창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규모를 확보할 수 없다”며 “자발적 동기를 자극하는 정교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행복도시락과 행복나래, 사회적기업 MBA, 사회적가치연구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온 과정을 소개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성과 측정과 보상을 실행해 온 것이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성과는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예산 투입과 홍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측정 비용을 낮출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정밀한 가치 측정에 드는 높은 거래 비용은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성과의 측정과 보상은 최 회장이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I)의 핵심이다. SK는 2015년부터 SPI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그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생태계 리더십 교류 프로그램(ELF)’에서 연설하고 있다. /SK그룹

최 회장은 SPI를 “국가와 사회의 비용을 줄여주는 일종의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보상을 시장경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WEF 슈왑재단 총회에서는 측정된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성과에 대한 보상을 시장경제 전반으로 확대하지는 제안은 지난 8일 WEF 슈왑재단과 사회적 가치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세 번째 보고서 ‘임팩트 경제: 공시를 수요로 전환하기’에도 담겼다.

최 회장은 공동서문에서 “SK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가 측정될 수 있고 금융 인센티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며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규칙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상하며,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시장 실패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월드포럼과 사회적 가치연구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첫 ELF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부산에코델타시티 분양 공고

1. 분양토지: 연구시설용지(7필지), 지원시설용지(7필지), 주차장용지(10필지), 단독점포겸용(8필지)

용도	필지수	면적(㎡)	예정가격(원)	블록번호	분양방법
연구용지	7	1,727.0 ~ 2,260.0	2,226,084,000 ~ 2,913,115,140	연구6,7	추첨
지원시설용지	7	858.0 ~ 1,037.0	1,938,585,000 ~ 2,628,795,000	지원3,4	입찰
주차장용지	10	641.0 ~ 5,019.9	770,802,500 ~ 7,329,054,000	주3,4,11,12,14,22,23,46,61,62	입찰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8	292.4 ~ 489.0	678,368,000 ~ 1,068,465,000	단독7,8,9	수의

2. 분양일정

구분	연구(추첨), 지원, 주차장61.62(입찰), 온라인(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주차장(입찰)	단독주택점포겸용(수의)
	방문접수(사업단)		
분양공고	’26.10.13. ~ 10.28.		’26.10.13. ~ 12.2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	’26.10.13. ~ 10.28. 10:00		-
개찰	’26. 10. 28.		-
수익계약 개시	-		’26.10.19. 10:00
수익계약 신청	-		’26.10.19. ~ 12.21.
입주계약체결*	’26.11.03. ~ 11.24.	-	-
분양계약 체결	’26.11.26. ~ 11.27.	’26.11.2. ~ 11.4.	’26.10.19. ~ 12.24.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분양상담실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877)		

* 연구지원·지원시설용지·주차장61.62는 부산EDC 도시점단사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내에 위치하므로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 체결必

3.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의 분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 <https://www.kwater.or.kr/land>)

분양 관련문의	판매부 ☎ (051) 220-0722~4
조성공사 관련문의	공사1,2부 ☎ (051) 220-0774,7,8

2026. 10. 13.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

마트 닫아도 전통시장 안 간다... 영업규제 실효성 논란

새벽배송으로 전통시장 매출 잠식 가능성 제한적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근거로 도입된 영업규제가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의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새벽배송 허용의 대가로 추진하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자금 조성 방안도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지난 2월 발주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영향 평가 용역에서 새벽배송이 전통시장 매출을 직접 잠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SSG닷컴의 새벽배송 서비스 운영 기간인 2021년 1~8월 대전 일부 지역의 상권 변화를 분석한 결과 편의점 매출은 4.5%, 슈퍼마켓은 4.0% 감소했지만 전통시장은 오히려 2.3% 증가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전통시장의 소비 수요가 중첩되는 정도가 낮으며 유통업계의 경쟁 구도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크지 않았다. 같은 연구에서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휴업할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대체 구매처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약 41%였지만 전통시장을 찾겠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대형 유통기업들이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총 1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벽배송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연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자금 조성의 전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가 관찰된 만큼 일부 업종에 대한 영향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골목상권 전반의 피해로 일반화하거나 1000억 원이라는 자금 규모의 근거로 삼기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골목상권 위축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 관련 논의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교착 상태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전통시장 상인단체는 새벽배송 허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